

글에 부쳐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일련의 테러, 대량 이주, 환경 악화, 여러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기본적인 시민권과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빈곤 국가들과 그 주민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은 최악이다. 주민들은 절대적 폐쇄 공간에서 살고 있으며 어떠한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가 초래한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는 문제도 있다. 20년 동안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에 고통 받고 있다. 1990년대 말의 기아로 인해 적어도 백만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대량 아사 사태는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철저히 부정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이 책은 북한에 대한 외부 인도적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정부의 식량 수입이 점점 줄어들어 원래 수입량의 1/10까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정권은 국제적 지원으로 인해 절박한 외화를 권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김정일 정권은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연대성은

북한 정부, 그 중에서도 특권 군대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 WFP)의 식량 분배 감시 노력은 한국과 중국의 직접 지원으로 인해 방해 받고 있다. 이 잔인한 북한 정권은 오로지 정권의 충성 분자들에게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충성심이 약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는 즉각 식량과 의료 지원이 박탈된다. 직장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교육 기회도 박탈된다. 소련의 수용소와 같은 정치범 수용소는 이러한 사람들의 최후 종착지이다.

우리는 거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굶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할까?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정부보다도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비록 북한 정권은 우리를 속이고 협박하고 있지만 말이다.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군대는 의심의 여지없이 동아시아 지역의 항구적 위협이다. 1930년대 스탈린 정부가 초래한 우크라이나의 대량 아사 사태를 상기하자. 이 대량 아사는 우크라이나의 지주 계급을 절멸시키고 전체주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북한의 비극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 지구상의 가장 최악의 정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

프라하 2005년 8월 1일